

# 금융권 채무조정 요청 서민 작년 10만 육박

열심히 일하면서 빚을 갚고 있지만 도저히 김당이 안돼 금융권에 채무조정(워크아웃)을 요청한 서민이 한해 1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금융당국과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신복위에 접수된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 등 채무조정 신청자는(신용회복지원자는) 지난해 9만1520명으로 전년에 비해 7.5% 늘었다.

특히 올 1분기에도 2만4500명이 신청해 지난해 4분기보다 7.2% 증가한 것으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채무조정 신청자는 2013년 9만7139명까지 치솟아 10만명에 유틸리티화됐다가, 2014년 8만5168명으로 다소 줄었다.

하지만 2015년 다시 9만1520명으로 늘었고 최근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어 올해

**신청자 9만 1520명으로 2014년에 비해 7.5% 증가**

**30~40대 월소득 150만원 이하 채무자가 절반 웃돌아**

10만명을 넘어서는 주목된다.

채무조정제도는 현재의 소득에 비해 빚이 과도해 갚기 어려운 서민들을 대상으로 연체이자 감면, 원금 일부 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의 채무변경을 통해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한다.

크게 연체기간 90일 이상인 채무자에게 원리금을 감면해주는 개인워크아웃과 연체기간이 31일 이상 90일 미만인 채무자에게 금융체무불이행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이자를 인하 등을 사전 지원하는 프리워크아웃으로 나뉜다.

지난해 기준으로 개인워크아웃 신청자는 7만6098명으로 전체의 83%를 차지했다.

40대가 31.8%인 2만4217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도 27.8%인 2만1113명으로 집계돼 30~40대가 59.6%에 달했다.

프리워크아웃 신청자는 1만5422명이었다. 프리워크아웃 역시 30~40대의 증권 증이 가장 많았으며 65.9%를 점유율을 보였다.

소득별로 보면 월소득 150만원 이하 채무자가 절반을 웃돌았다. 개인워크아웃은 해당 소득 구간 신청자가 전체의 74.9%

프리워크아웃은 60.5%로 나타났다.

부채는 2000만원 이하의 신청자가 전체의 53.5%인 4만723명으로 가장 많았고 2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가 1만2753명(16.2%)으로 뒤를 이었다.

금융회사와 협의를 통한 사적조정제도이지만 채권 금융회사의 동의율도 높았다. 지난해 기준으로 조정에 들어간 채무 사례의 98%는 조정인이 의결됐다고 신복위는 설명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채무조정 신청의 절반 이상은 30~40대 이지만 최근 들어 학자금 등의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고, 노후를 준비 못한 노인들의 개인워크아웃 신청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인진수기자

## 이제는 ‘문서관리 솔루션’으로

**프린터·복합기 업체들 업무환경 디지털화에 따라 변화**

‘종이 뽑는’ 기계의 수요가 줄어들면서 프린터·복합기 업체들이 ‘문서 관리 시스템’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종이 문서를 사용하는 경우가 적어지고 업무환경이 디지털화되면서 프린터·복합기 업체들이 클라우드, 보안 등의 기능을 갖춘 ‘문서 관리 솔루션’ 서비스 영역으로 사업에 적극 뛰어들고 있다.

실제로 기업들은 이제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인 ‘스마트워크 솔루션’으로 돌아서는 추세다. 지난 1월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가 공동 발표한 ‘2015 스마트워크 이용현황 실태조사’에서 지난해 스마트워크 이용률은 14.2%로 3년 전에 비해 4% 가까이 증가했다.

이전에는 정부기관과 대기업 위주로 스마트워크가 도입됐으나 현재는 중소·중견기업도 공략하고 있는 상황이다.

프린터·복합기 업체로 오랜 역사를 자닌 후지제록스와 캐논 신도리코 등은 솔루션 사업을 계속 확장하고 있다. 후지제록스는 가장 빨리계 움직여 솔루션 사업에 뛰어든 기업이다.

‘클라우드 스캔 자동화 서비스’를 선보여 서류 스캔과 사내 전달 과정을 단축했다. 스캔 작업 시 복합기 설정 환면에서 미리 설정해둔 문서 종류를 선택하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바로 담당자와 연결된 클라우드 서버 ‘워킹풀더’

에 자동 저장되는 시스템이다.

지난 해에는 기존 MFS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한 ‘차세대 MFS’ 서비스를 도입했다. 차세대 MFS는 문서환경 분석 및 최적화, 보안과 통합, 자동화 및 감소화 총 3단계의 서비스 로드맵을 기반으로 문서관리 컨설팅을 제공한다.

신도리코는 문서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리눅스 기반의 문서보안 솔루션 패키지 ‘신도 시큐원(Sindoh SecuOne)’을 출시하고 시장공략을 강화하고 있다.

작년 2000명 이상의 대기업과 공공, 금융기관을 타깃으로 출시된 이 솔루션은 주민등록번호, 법인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검출해 PC에서 인쇄 명령을 내리면 해당 정보를 미스킹해 출력한다.

캐논코리아 비즈니스 솔루션은 ULM(Universal Login Manager)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ULM은 중소기업을 고객층으로 설정한 솔루션이다.

사진, 계정과 비밀번호, 카드 등 다양한 인증 방법을 통해 허락된 사용자만 해당 기기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안 환경을 갖췄다. 별도의 서버 없이도 시스템 구축이 가능해 서버 구축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후빌주자인 삼성전자의 프린팅솔루션 사업부도 마찬가지다. B2B 복합기 제품을 출시하면서 삼성전자는 최근 솔루션 업체들을 연달아 인수하며 시장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2010~2017년까지 전국 1만3217개 마을에

올해 1460개 소규모 농어촌 마을에 100Mbps급 광대역망(BnN)이 구축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은 올해 총 264억원(국비 66억원)을 투입해 농어촌 BnN사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50세대 미만 소규모 농어촌 마을에 100Mbps급 인터넷을 연결, 도시와 농촌간 네트워크 인프라 격차를 해소하고 보편적 방송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BnN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현황 조사를 거쳐 올해 사업대상 1460개 마을(도서지역 133개 포함)을 선정했다. 11월까지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올해 사업으로 인천·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 지역 총 4만5572세대(9만4949명)가 새롭게 BnN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89개 전남 섬마을 등 133개 도서지역에 BnN이 도입돼 주민 실생활 개선인 터넷교류 IPTV시청, 온라인쇼핑, 스마트팜 운영 등과 지역관광 활성화에도 전제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진수기자

## 1460개 소규모 농어촌마을 광대역망 구축

**100Mbps급 인터넷 연결**

### 우수공시법인 상장수수료 전면 면제

앞으로 우수공시법인에는 상장수수료가 전면 면제된다. 금융당국은 기업 눈높이에 맞게 공시 및 회계제도를 바꿔 국내 경제에 협력을 불어넣겠다는 방침이다.

8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 공시 및 회계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공시우수법인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이는 불공시에 따른 폐널티는 과도한 반면 우수공시에 대해서는 실질적 혜택이 거의 없어 공시업무를 기피하게 된다는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한 조치다.

금융당국은 제재 위주의 공시관리 방식을 인센티브 제공 등 우대혜택 방식으로 개선한다.

이를 위해 공시우수법인에 대해 상장구조를 1년간 전면 면제한다. 상장수수료는 연간 8000만원을 최대한도로 한다.

또 현행 자율공시 비중 10% 이상인 벌점 감경 요건을 5% 이상으로 확대하고 자율공시 범위에 자율해명공시도 포함하기로 했다.

이석란 금융위 공정시장과는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올해 2분기 중 유가·코스닥시장 공시규정 및 상장규정 시행 세칙 등을 개정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기업들이 공시행위를 부담으로 느끼지 않고 적극적 흥보수단으로 이해하는 공시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공시부문 개선을 위해 분·반기 보고서 공시항목(113개) 투자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항목 또는 효용성이 낮은 정보 등에 대한 기재는 생략하고 기존 투자설명서 제도를 대체할 핵심투자설명서 제도 도입, 공시시스템 고도화 등을 추진한다.

회계부문도 손본다.

상장예정기업 등의 지정감사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회사구직이 아닌 사유’로 지정감사를 받는 경우 회사가 감사인과 협상(감사수임료 등)에 따라 지정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한다.

/온진수 기자

### 4월 자동차 수출·생산 모두 크게 줄어들어

지난달 자동차 수출과 생산 모두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완성차 실적을 잠정 집계한 결과 자동차 수출 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0% 줄어든 22만 852대를 기록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1월(-19.7%)에 이어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0월(-22.1%) 이후 최대 낙폭이다.

산업부는 “미국, 호주, 캐나다, 유럽연합(EU)으로의 수출은 늘었지만 중국, 중동, 중남미 등 신호국 경기침체와 조업일수 감소 등에 따른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현대는 액센트·이언페·싼타페 등 주력모델 수출 감소로 전년동월대비 18.4% 기아는 모닝·K시리즈·쏘렌토 등 주력모델 수출 감소로 24.2% 각각 줄었다. 한국GM도 신형 스파크 수출이 증가 했으나 크루즈·캡티바 등이 감소하며 8.2% 줄었다.

자동차 전체 수출 금액은 작년보다 18.3% 감소한 35억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자동차부품 수출도 중국 및 신흥시장의 경기침체, 조업일수 감소 등의 영향으로 작년보다 15.4% 감소한 20억2000만 달러의 실적을 올렸다.

자동차 생산도 작년보다 13.1% 감소한 36만8607대를 기록했다. 조업일수가 줄어든 가운데 수출 감소가 더해져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현대는 13.5% 기아는 14.4% 각각 감소했다.

내수는 개별소비세 인하와 니로·신형 K7·SM6·타볼리에 등 신차효과로 작년보다 3.7% 증가한 15만8427대를 판매했다. 이에 따라 국산 차 판매 점유율도 2014년 12월(88.1%) 이후 최대치(87.2%)를 기록했다.

/온진수 기자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